역사관 획일화 강요에 교육현장 대혼란

리뷰 2015 ⑤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계·교사·시민단체 반발 속 속전속결 밀어붙여 확정 고시 '밀실 집필' 등 잡음 이어져 시·도교육청 대안교과서 개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온 나라를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교육 현장 뿐 아니라 나라의 모든 현안이 국정화에 묻혔다.

혼란의 불씨는 정부가 지난 10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당겨졌다.

각계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교과서를 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광주지역 역사교사 등 전국 역사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내용을 독점하고 단일화해 아이들을 획일화·우민화 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1인 침묵 시위가 곳곳에서 진행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년 역사 교육을 담당했던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 통탄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위"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국립대인 전남대·서울대 사학·역사교육과 교수들을 비롯, 전국 역사 전공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를 선언했고 대학생, 시민·사회단체도 거리로 나와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전남 교육청을 비롯,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국정화에 맞선 대안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015년 11월 3일. 정부는 기어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역사학계, 시민사회, 교육계 등의 국정화 반대·철회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보란 듯 국정화 방침을 밀어부쳤다.

반발이 격화됐다.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교수들의 선언과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이 곳곳에서 타올랐다.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05년 1월 19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정부의 불투명하고 부실한 국정화로 인한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집필진을 비공개로 선정해 '밀실 집필'에 대한 교과서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1년도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교사를 집필진으로 선정하는 부실 심사도 드러났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시·도 교육청도 대안 교과서 제작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전북·강원·세종 교육청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할 대안교과서를 오는 2017년 3~9월 제작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또 초·중·고 ▲교과서 제도에 대한 분석 ▲역사교과서의 방향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점과 대안 등을 살피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을 편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역사교육의 공정성·다양성,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과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국정화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해의 사자성어 '昏庸無道'

〈혼용무도〉

교수신문 선정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는 의미의 '혼용무도'(昏庸無道)가 교수들이 고른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교수신문은 8~14일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5개를 놓고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혼용무도'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함께 이르는 '혼용'과,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 속 '무도'를 합친 표현이다.

'혼용무도'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는 "연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지만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면서 "중반에는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 압력을 넣어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 낭비가 초래됐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혼용무도'에 이어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는 뜻'의 '사시이비'(似是而非)가 14.6%의 지지를 얻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교수 설문조사로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전공, 세대, 지역을 안배한 추천위원단이 사자성어 22개를 추천한 뒤 이 중 5개를 최종 후보로 골라 전국 교수들에게 설문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미향 광주' 맛집 99곳 선정

광주시는 남도 음식의 특색과 매력을 갖춘 '제6기 광주 맛집' 99곳을 뽑아 지난 18일 발표했다. 광주 맛집은 신청과 추천을 받은 120곳 중 서류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음식 관련 학계, 전문가, 협회, 2015 맛집탐방대원이 참여한 관광블로그기자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식 등 비노출 현장평가로 음식의 맛, 분위기, 서비스, 위생, 편의성 등을 심사했다.

특히 미향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통과 향토성, 역사성, 지역 특산 재료 사용 등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선정된 맛집에 내년 1월 지정패를 전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맛집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 재해위험지구 방문 윤성규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오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을 방문, 대표적 재해위험지구인 얼음바위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올 271개사와 5조9000억 투자유치 협약

61개사는 혁신도시 투자 의향

전남도가 올해 271개 기업과 5조9000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무려 61개 기업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덕분이다.

전남도는 20일 "지난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2015 전남 투자유치 한마당을 개최해 선진수산(목포 대양산단), (주)아폴로(영광 대마산단) 등 15개 기업과 1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의 투자유치 업무를 총결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포함, 올해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유치한 투자협약 업체는 271개사, 액수는 5조9200억원에 달한다.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 1만3613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LG CNS, GE코리아, 보성파워텍 등 61개 에너지 부문 기업이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맺어 지난해부터 모두 94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50곳은 이미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무소를 개소했다.

또 그동안 분양이 부진했던 목포 대양, 나주 혁신, 장흥 바이오식품, 강진 환경, 함평 동함평, 영광 대마산단 등도 활기를 찾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날 투자유치 한마당에서는 해덕세라믹스(주), (주)이바돔 등 2개 기업과 민간인, 공무원 등 12명이 투자유치 유공자로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투자유치 우수 시·군 대상에는 여수시가, 최우수 시·군은 함평군과 영광군이, 우수 시·군은 나주시·장흥군·장성군이 선정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600명 동원 도로 막고 체납차량 단속 5억 받아내

전남도 체납지방세 징수 백태

#전남도는 지난달 말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600여 명의 인원을 동원, 도내 15개 톨게이트와 간선도로를 막아섰다. 이 단속으로 1298대의 지방세 체납차량을 골라낸 전남도는 5억800만원을 받아냈다.

#전국 경매신청 현황을 조사해 서울, 부산 등 관외 법원의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은 체납자를 찾아내 5억원을 징수했다. 타 시·도 경매는 지자체로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 체납자가 이를 챙기려했으나 전남도가 경매배당금을 압류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전남도가 갖가지 '묘수'를 총동원해 올해 이월체납액 706억원 가운데 253억원을 거둬들였다. 징수율은 35.9%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5%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열린 전국재정혁신발표대회에서 체납액 징수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및 시상금 1억5000만원도 챙겼다. 전남도의 이 같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는 만성 지방세 체납자의 허를 찌른 공격적 징수 대책에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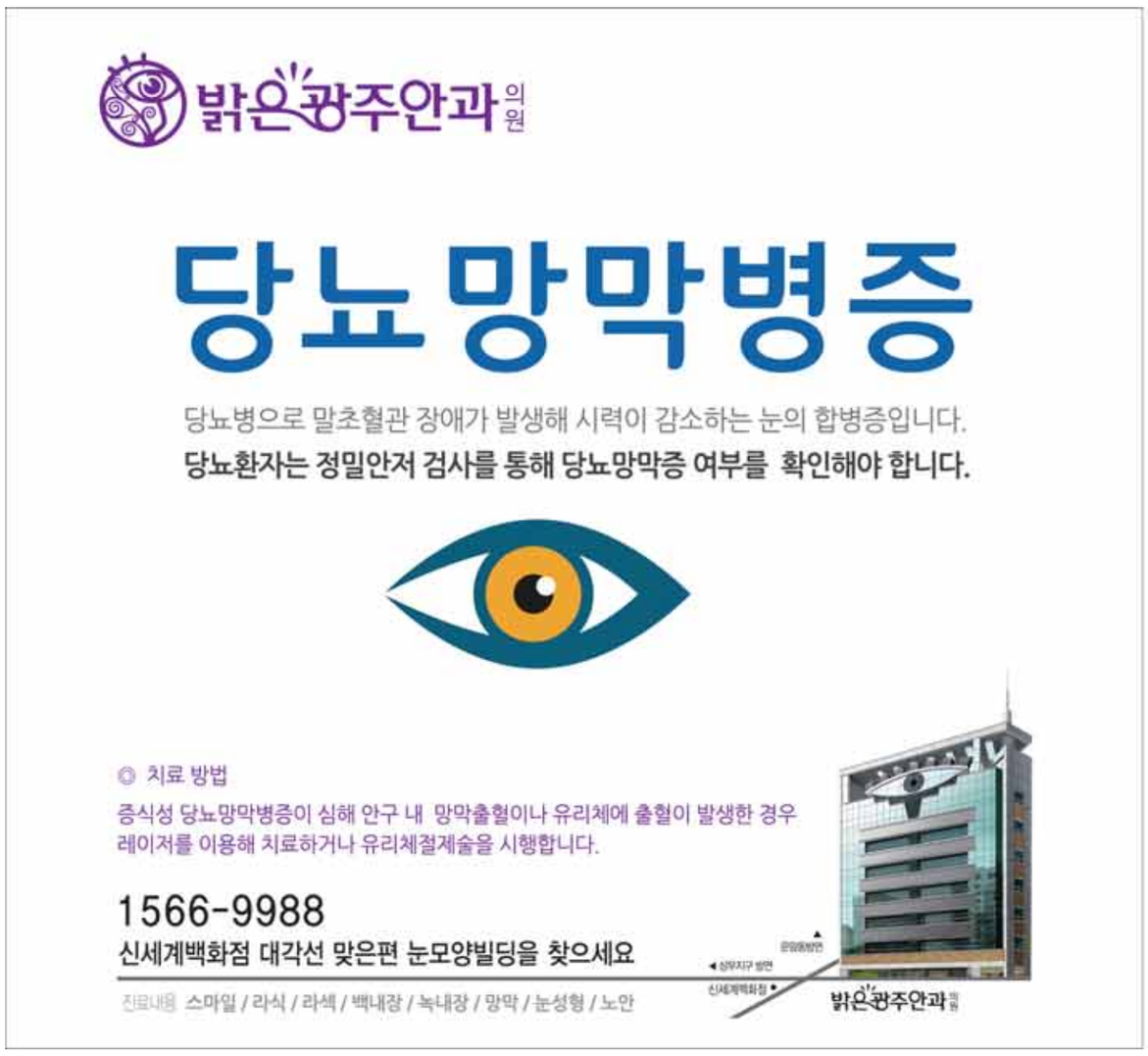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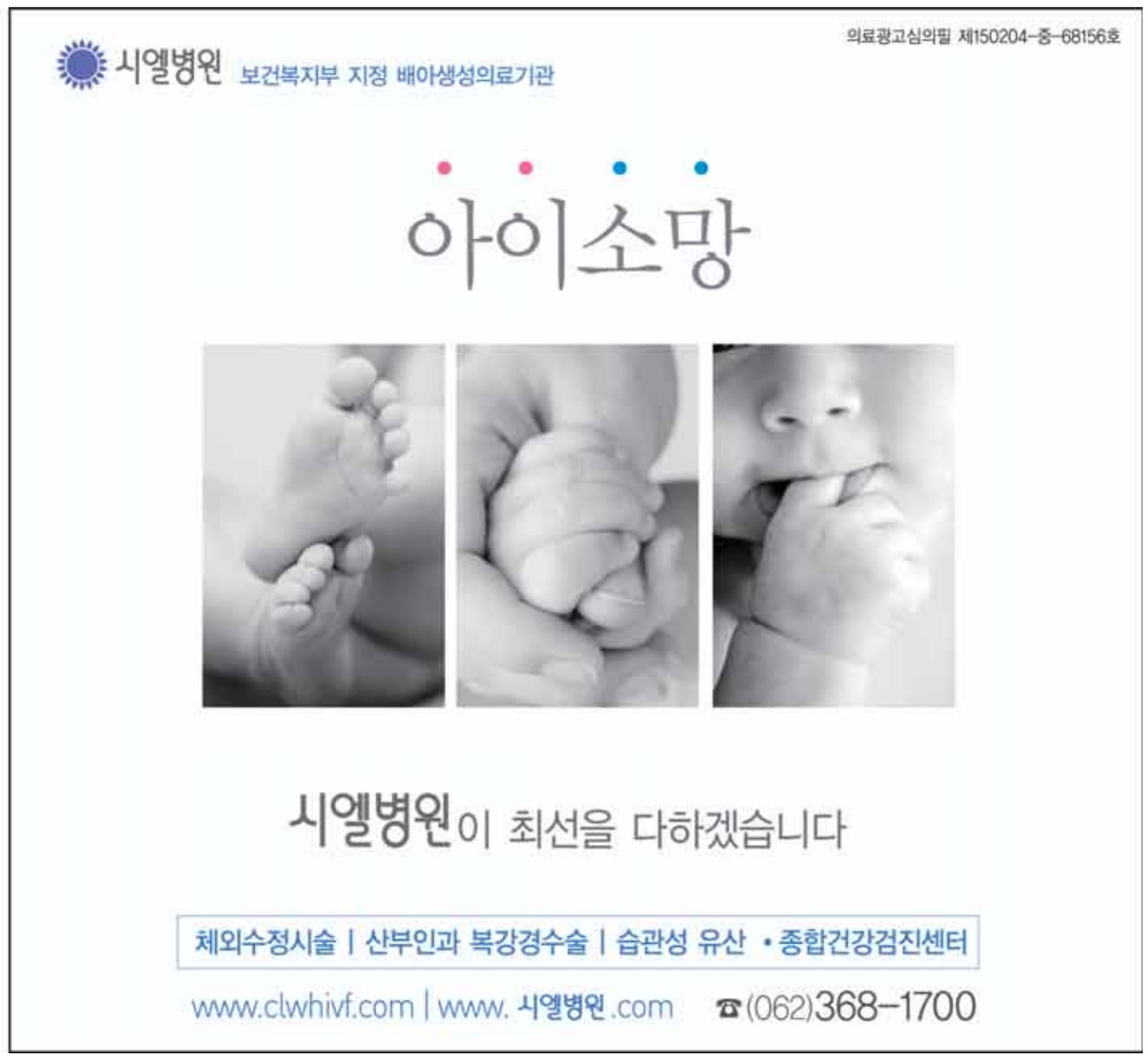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골라내거나 농업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체납자를 찾아내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각각 5억800만원과 7억원의 체납액을 줄였다. 부도처리된 지역건설업체의 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서류상 종료되자 신속하게 압류를 해제한 뒤 공매를 의뢰, 22억원을 징수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또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의 체납자 재산이 경매에 들어간 것을 포착해 경매배당금 5억원을 압류한 끝에 받아내기도 했다.

김영희 도 세정담당관은 "징수 신장률은 전국 1위, 징수율은 전국 도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6개월간 가동된 전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과 지방세 고액체납정리단에 참여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축사시설자금 융자 20억, 유통시설 30억으로 상향

전남도, FTA 피해 축산 대책

전남도가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전남도는 20일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융자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 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융자 한도액 가운데 축사시설자금은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산물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원한도 20억원인 축산기술개발사업자 융자를 신설하고 전업규모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했다. 융자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영자금의 경우도 농업인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려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고, 판매장·가공장 운영업체는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